

신천지 행정조사로 압색 명분 축적

정부, 과천 신천지 본부 대상 검찰청 포렌식 분석팀 대동... 비협조시 강제수사 돌입

정부가 5일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 조사에 착수하면서 언제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됐다. 이번 조사로 방역 당국이 원하는 보다 정확한 신도 명단이나 예배 출석 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조사 자체가 수사 기관이 관계 법에 따라 신천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신천지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시작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

자부)은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돼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검찰청 포렌식 분석팀 등이 참여했다.

중대본은 행정 조사에 앞서 지난 2일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신천지 관련 각종 자료 확보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관계 법령에 따른 방역 당국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강제처분권, 강제조사권 등에 근거해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법률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신천지가 자료 제

출을 거부·기피·방해 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 조사를 압수수색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건 그간 신천지를 두고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보였던 방역 당국과 수사 기관이 최근 입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각급 검찰청에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등에 신천지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방역 당국은 지난 2일 "강압적인 조치는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기류는 달라졌다. 추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총괄조정관도 같은 자리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나 판단은 수사 기관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출입국과 예배 당시 출입 관련된 정보를 다 알게 된다면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크게 보면 방역 당국 입장과 법무 당국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 조사는 신천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행정 조사에 앞서 신천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합당한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신천지 입장에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행정조사에 협조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행정조사에 검찰청 포렌식 분석팀을 대동한 것도 사실상 압수수색 못지 않은 강도높은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8%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8%, 모름·무응답이 7.2%였다. /뉴시스

선거운동 대신 코로나19 방역 동참

민주 한병도 예비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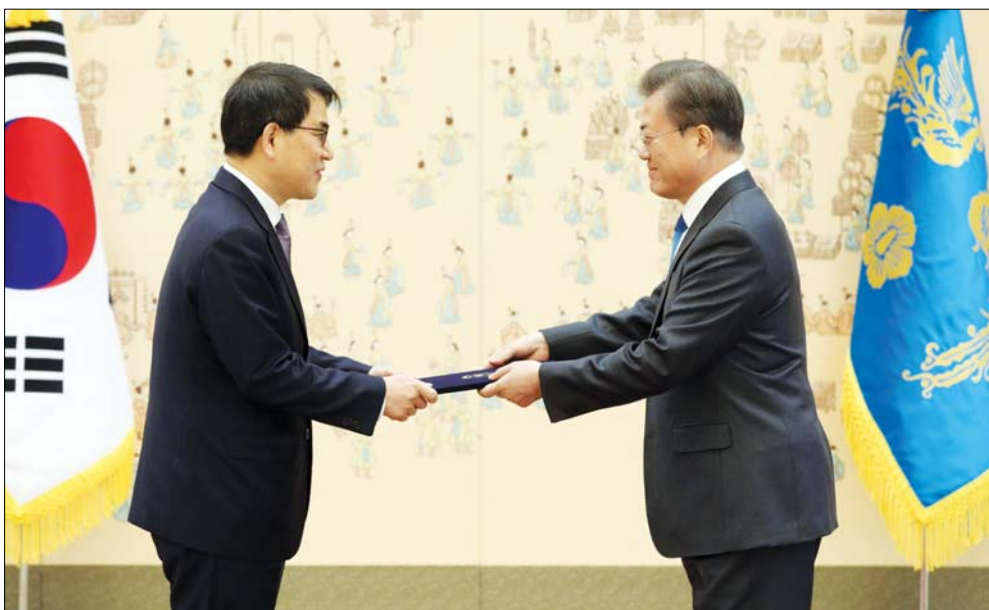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익산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한 예비후보는 최근 영등2동 상가번영회원들과 함께 상가 일대에 대한 방역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와 상가번영회원들은 방역복과 마스크 등 개인별 소독 장비를 착용하고 지역민들의 방문이 잦은 공영이용시설과 상가를 대상으로 휴대용 자동 분무기를



이렇게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한 예비후보는 "현재 익산시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어 다행스럽지만 혹시 모를 지역 유입을 방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에서 노태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오늘 선거구 확정안 의결 전망

"2월 임시국회까지 최대한 빠른 처리 노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재확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오후 2시로 잡은 걸 보면 그전까지는 선관위에서 전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오늘 낮 12시까지 제출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시간상으로 무리라고 했을 듯하다. 그

래서 (행안위를) 내일로 미룬 거고, 그 시간까지는 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일부터 재외국민 명부가 작성되는 거로 알고 있어, 오늘 (분회의) 통과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진 않겠지만 불가피하게 못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까지,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확정위에 확정안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전날 제출된 확정안이 공직선거법상 제25조의 1항과 2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행안위의 재의 요구안 의결 후 회동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1개에서 2개로 분할하고, 경기 군포시갑·을 선거구를 합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폐합 대상이던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 상록·단원구, 분할 대상이던 경기 화성시 선거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뉴시스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고상진 "고대 유적·관광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 건설"

민생당 고상진 예비후보(익산)가 "고대 유적과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2000년 왕도 익산의 정체성 정립이 문화관광도시 조성의 선결 조건"이라며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가야사 연구가 본격 진행되면서 익산의 역사적 정통성을 위한 마한사 연구는 관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

했다. 또 "익산의 마한 역사문화권 지정을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마한의 중심지였던 익산은 수많은 유물·유적이 분포되어 문화자원을 보존·개발할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마한이 독자적인 문화자원이 아닌 백제의 병합대상으로 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연구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한 문화·역사 가치를 규명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며 "국가가 직접 마한 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익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최저생계비 보장"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의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욱 고 통스러운 시간이 연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2일 처리된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민들에게 단비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도의회, 3월 임시회 일정 조정

전북도가 긴급편성한 추경예산 2456억원 심의·의결

코로나19 확산 방지 역량 집중토록 도정 등 질문 취소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일 개최하는 제37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조정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일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사업 등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3월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456억원)을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전격 취소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9~10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와 11~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 신속한 집행을 도울 계획이다.

송성환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 대응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이번 의사 일정 변경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팸플렛 / 리플렛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